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13
----------	------

발의연월일 : 2021. 3. 24.

발 의 자 : 신현영 · 허종식 · 김희재
강민정 · 박 정 · 고민정
김주영 · 오영환 · 이용우
강선우 · 이용빈 · 박홍근
최종윤 · 민형배 · 이규민
유정주 · 김승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격리되거나 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유급휴가를”을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u>격리되는 경우</u> <u>「근로기준법」 제60조</u>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u>유급휴가를</u> 줄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 ----- <u>격리되거나</u> <u>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u> <u>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u> <u>조</u> ----- ----- <u>또는 임시예방접종</u> <u>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u> <u>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유급</u> <u>휴가를</u> -----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41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u> <u>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국</u> <u>가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피보험자, 「산업재</u> <u>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u> <u>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u>

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